

제2기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발족

지방자치 발전, 여성 손으로 일군다

정책개발·조례청원운동 전개 계획, 내년엔 시정지기도 꾸릴 예정

지역살림 챙기기에 여성들이 나섰다.

지난 93년 2월 지방자치의 내실화는 주민, 행정부, 의원 3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일 속에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 각 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이 지난 15일(오전 10시 종로성당) 2기 발족식을 가지고 20일 개원한 지방의회 감시에 돌입했다.

이번에 구성지기가 구성된 지역은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 성남시 등 5개 지역으로 총 50여명이 활동할 예정. 이들은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시·구정 질의를 검토하고, 상임위별, 의원별 평가지수를 산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상임위는 여성과 긴밀하게 관련된 식품, 환경, 복지, 교육환경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모임'은 앞으로 정기의회 개원과 별개로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일상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활동방향에는 정책개발과 조례청원운동, 주민공청회 및 시민토론회 개최, 속기록분석을 통한 주요 사안 및 문제점 지적 등 생활 정치에의 참여활동, 의원에게 격려편지 보내기 등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활동, 의회 방청과 모범 의원 선정 등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활동, 방청 캠페인이나 보고서 발간 등 홍보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여성모임'은 그간의 의정지기 활동을 토대로 내년에는 '시정지기 여성모



지역살림을 챙기기 위해 여성들이 나섰다. 사진은 최근 2기 발대식을 가진 주부 의정감시단.

임'을 구성해 시정감시도 벌일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민우회는 발대식에 맞추어 주민의 의정참여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묻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진행됐으며, 서울 및 수도권 15개 지역의회 의원 1백26명이 응답했다.

기초의원 1백26명 조사 결과

44%가 주민의정활동 긍정
의회권한 강화 위해서는 '자치권보장' 지적

조사결과 의원들은 지역문제 해결과 봉사를 위해 가장 많이(54.1%) 출마했고 다음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권유(38.1%), 정계진출의 첫단계로(3.9%) 등의 순으로 답했고, 선거운동시 가장 어려워

치제에 대한 관심 부족(53.2%) 상대후보의 비방과 감시(14.3%)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힘들(10.3%) 개정선거법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제약(9.5%), 선거자금의 부족(9.5%) 등을 꼽았다.

이들 의원들은 성실한 의원의 모습을 묻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의정참여를 도모하는 사람

(37.3%)을 우선으로 꼽았고, 지자체의 행정과 운영을 잘 감시하는 사람(24.6%)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19.8%) 지역복지를 위해 애쓰는 사람(17.5%)이라 응답했다. 또 임기동안 이루고 싶은 지역과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도모, 지역환경문제, 주민복지를 위한 재정확대, 교통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주민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의정보고회를 갖거나 주민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현재 반사회, 등산회 등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해 주민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9.2%) 민원(21.4%) 지역시민단체와의 교류(13.5%)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시민단체의 방청, 간담회 등 의정참여활동에 대해 의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의 44%가 의정참여활동이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의정활동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 답했고, 주민의견수렴이 용이할 것(29.4%)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필수적인 활동(19.4%)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바람직한 관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 의원들이 시민단체에 요구한 의정참여 활동에는 지역주민과 의원모임(38.1%) 간담회(23.6%) 방청활동(18.4%) 토론회나 세미나(9.6%) 등이 있었다. 의회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치권보장(34.9%) 권한의 확대(24.6%) 전문인력 배치(18.3%) 등을 중요하게 꼽았다.

(수정민 기자)